

한국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과 기본소득

주은 (Juon Kim)

스밀라 (Smila youhyung Park)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BIYN)

1. 들어가며

이 글을 쓰고 있는 우리는 각각 1980년대의 끝자락과 1990년대의 시작에 태어나 현재 20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youth'들이다. 이 '청년'이라는 분류는 긍정적인 가능성보다는 공통의 무능, 무책임과 삶의 곤경으로 정의되며, 계층이나 계급이라는 전통적인 분류와는 다르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열정적이고 희망 찬, 젊은 인재들이라는 의미를 내포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청년'이란 축적되어가는 생태 문제와 빈곤의 문제를 짊어진 채 불황이 예고된 사회를 살아나가야 하는 세대를 칭한다. 자원의 분배가 선행되지 않은 채 닳진 성장 없는 시대에서 대부분 부모의 소득으로 '소비'의 방식으로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묘한 신세가 되어버렸다.

우리 또래의 청년들은 어린 시절이었던 1990년대 말에 IMF를 겪었고, 대학생이던 2000년대 후반 서브프라임 사태를 경험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은 2011년 가까운 일본에서 벌어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지켜본 바로 그 세대이다. 특히 97년 외환위기는 이들에게 여러 구체적인 상황들로 기억된다. 그 시기에는 친척이나 친구네 집이 망하거나, 누군가는 빚쟁이에 쫓겨 도망가 연락이 끊어지는 일이 왕왕 벌어졌고, 하루에도 몇 개의 크고 작은 회사가 부도나거나 부도 날 위기에 처했으며, 전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집안에 있는 금붙이들을 국가에 봉헌했다. 이처럼 IMF를 겪은 우리들은 '몰락의 공포'를 내재화하고,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태도로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급속하게 흡수된 채 성장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실업, 청년빈곤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청년정책이 선거 정책에 팔막히나마 포함되기 시작했으며 ‘청년유니온’¹과 같은 청년단체와 함께 ‘청년운동’이 태동했다. 바로 그런 시점에 우리 역시, 당사자로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조건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었다. 우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효과적인 자원 재분배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은 저성장, 고실업 시대의 빈곤에 대한 대안인 동시에, 다양한 상상력을 지녔으나 이를 펼칠 자원이 없는 청년, 즉 미래세대에게 실질적인 실행력을 쥐어줄 도구로서 매력적인 선택으로 여겨졌다. 기본소득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기획할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를 상상하며, 또 그것을 실현하는 운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쓴다.

기본소득의 장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글들을 통해 말해져 왔기에 이 글에서는 그보다 한국청년들의 구체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리가 속한 한국의 청년들이 현재 공유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노동, 주거, 부채 그리고 그 밖의 주요한 삶의 영역을 드러내는 지표들을 통해 살펴보고, 현행 제도와 운동의 한계에 맞서 기본소득이 한국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2. 한국의 청년들과 기본소득

2.1 기본소득이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기본소득의 정의를 간략히 되짚어보자.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인데, 기본소득의 정의를 이루는 각 부분들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기본소득의 특징인 ‘무조건성’, ‘보편성’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과 상관 없이 지급된다는 것’과 ‘노동 여부를 조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빈곤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빈곤에 대한 낙인이 생기지 않고, 초과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지급이 중단되지도 않는다. 또한 기본소득은 고용 보조금과는 달리 현재의 노동 여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 현황을 증명할 필요도, 수급을 위해 원치 않는 일을 할 필요도 없다.

또 다른 특징인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된다’는 것은 기존의 가구 단위 복지와 달리 모든 개인에게 지급된다는 뜻으로 개인이 속한 가구 유형이나 나이와 상관 없이 모든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물이 아닌, 정기적으로 현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개인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든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이고, 개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곳에 기본소득을 사용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획하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재분배 정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사회가 적극적으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

¹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조. 2010년 창립되었다. <http://cafe.daum.net/alabor>

여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그리고 사회 전체의 수입으로 기존 제도권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관점이 분명히 드러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2 한국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2.2.1. 일을 해도 안 해도 불행한 청년들

학업을 마친 한국의 청년들이 한 명의 노동자가 되어 곧장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온통 암울한 지표들로 가득 차 있다. 한국의 전체 노동자 가운데 1/3이 비정규직 노동자², 1/4이 저임금 노동자이며³, OECD 19개 국 중 최저임금은 최저, 노동 시간은 최고 수준에 근접한다. 산재율 역시 높다⁴. 석유도 지하 자원도 없고 가진 자원은 노동력 뿐인 국가이므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갖가지 방식으로 노동력을 착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이 예사로 통용된다. 1970, 80년대 노동현장에서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면서 얻어낸 경제성장을 근거로, 오늘날의 청년 노동자들 역시 과중한 노동을 요구받는다. 한국에서 야근이나 휴가 반납 등은 개인의 ‘자발성’이나 ‘열정’의 척도로 작동하기에, 야근을(심지어는 불필요한 야근이나 원치 않는 회식조차도) 거부하거나 규정에 명시된 유급휴직을 사용하거나 추가수당을 정확히 요구하는 것조차 때로는 ‘튀는 행위’로 여겨진다. 고용주나 관리자 뿐 아니라 동료들 사이에서도,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다. 이를 통해 얻는 회사의 이윤 증가는 결국 노동자의 고통 증가를 동반하는 효율증가⁵라고 할 수 있다.

낮은 노동조합 조직율⁶도 조건의 악화에 한 몫 한다.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 노동자로서 발언권을 갖기란 거의 불가능한데, 직장에 노동조합이 있어 부당한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보복성 해고의 위협이 남는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사회보장은 미비하고 따라서 해고는 당장의 생계 곤란으로 직결된다. 한국 노동운동진영 대표적인 구호인 ‘해고는 살인이다’는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다.⁷ 한국

² 2014년 3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약 1/3이 비정규직이다. 시도비정규직 근로자규모, 통계청,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45&vw_cd=&list_id=&scrl=&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0

³ 저임금 근로자 비율, 통계청,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99

⁴ 2010년 기준 산재 가입률은 23%로 낮은 수준이다. 산재보험 가입실태(가구수), 통계청,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TX_33109_A288&vw_cd=&list_id=&scrl=&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0
2013년 재해율 0.59%로, 나라마다 집계 방법이 다르다는걸 고려해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 편인데, 가입률이 낮음을 고려하면 실제 재해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재해현황, 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4

⁵ 서상철, ‘한국 직장인이 야근을 하는 진짜 이유는?’, 프레시안 신문 2011.6.7

⁶ 2012년 노동조합 가입률은 10.3%이다.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통계청,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1

⁷ 한국의 대표적인 사례로 쌍용 자동차의 경우, 2009년 정리해고 이후 복직 투쟁을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25명이 자살하거나 사망했다.

의 노동자들은 좋지 못한 노동 조건을 견뎌야 하는 동시에 그 문제 해결의 통로조차 가로막힌 겹겹의 곤경에 처해있다.

그나마 이러한 지표들은 어찌됐든 ‘일자리’를 얻은 이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줄어드는 일자리를 놓고 청년들이 벌이는 취업 전쟁에서 경쟁률은 해마다 최고를 경신한다. 올해 상반기 공개 채용을 실시한 6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취업 경쟁률은 102대 1⁸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과 재작년의 약 80대 1 수준에 비해 큰 폭 상승한 결과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취업에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조건을 일컫는 ‘스펙’을 갖추는 데에 취업 이전의 모든 시간을 바치고 있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이라는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청년(15~29세)의 고용률은 2013년 5월을 기준으로 40.1%를 기록했고, 최근엔 30%대까지 떨어졌다. 첫 취업을 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 11개월로,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오로지 미래의 임금 노동을 위해 소비하는 셈이다.⁹ 무엇을 하고 있든 안하고 있든 불안한 일상 속에서 임금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갖기란 불가능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 또는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란 사치다. 친구와의 만남이나 취미 생활을 모두 포기하고 취업을 위해 시간을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만을 요구 받는다.¹⁰ 그래야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자원 배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이 허상일 뿐이라는 것은 청년들도 이미 알고 있다. 만성 실업과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청년과 청소년에게 시간은 곧 돈이기에 시야를 넓히고 적성을 계발할 시간이란 가상 세계의 이야기일 뿐이다.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려 주는 것은 나날이 불어나는 대출이자의 시계 뿐이기 때문이다. 청년층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의 양극화가 이미 두드러지고 있다. 부와 빈곤의 대물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적 불안정은 청년들의 진로 선택의 폭을 더욱 제한한다. 청년들은 사회적 기여나 자기 성취보다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역량을 소모한다.

최저임금이 낮은 한국에서는 저임금 임시직의 경우 장시간 노동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청년들은 안정적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러나 취업 준비에 많은 시간과 자본이 투입된다고해서 성공적인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찌감치 정규직 일자리를 포기하고 부모의 부양을 받으며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그룹도 존재한다. 장기적 전망 설계 자체를 포기하거나 유예하는 이들은 자조적으로 스스로를 ‘잉여’로 칭한다. 물론 애초부터 경제적 성공과 별개로 원하는 활동을 택하는 경우도 있으나 굉장히 소수인데다 결국 이들 역시 높은 확률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혀 고달픈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또한 사회는 유연한 고용이란 미명 하에 만연하는 실업과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 그리고 낮은 임금으로 인한 빈곤을 개인이 감당

⁸ 출처: 인터넷 취업포털 잡링크_www.joblink.co.kr

⁹ 서울, 청년 구직의 어려움, 서울 인포그래픽스, 2013.

http://www.youthhub.kr/uploads/attachment/file/5354c9c2cf97721f7c00067a/%EC%84%9C%EC%9A%B8%EC%B2%AD%EB%85%84_%EC%9D%B8%ED%8F%AC%EA%B7%B8%EB%9E%98%ED%94%BD_%EC%B5%9C%EC%A2%85%EA%B2%B0%EA%B3%BC%EB%AC%BC.pdf

¹⁰ 브루스 액커만 외, <분배의 재구성> 중 가이 스탠딩의 ‘CIG, COAG, COG: 논쟁에 관한 비평’ 중에서, 나눔의 집, 2010

해야 할 문제로 돌리고 있다. 청년들은 각자가 경험하는 곤란이 스스로의 무능이나 게으름 때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임금노동과 스펙 쌓기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 혹여 급작스런 사고나 질병에 등에 의해 노동을 이어나갈 수 없을 때도 사회가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므로 건강 관리 역시 임금 노동을 위한 노력에 포함된다.

이에 대한 각계의 대책들을 살펴보자. 각 정당의 노동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일자리 문제는 청년실업 문제로 수렴하고 있다¹¹. 문제가 한 세대로 축소되며 해결 방안 역시 부분적인 차원에 그친다. 이를테면 ‘청년고용할당제’나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청년실업 문제라는 구멍을 기계적인 방식으로 양적으로 메우는 데 그치는 발상이다. 또한 일자리 위주의 정책은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워킹푸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기업들은 채용을 늘리기는 커녕, 무급 인턴이나, 대학생 서포터즈 등의 제도를 통해 미래의 일자리를 대가로 청년들을 착취한다. 의미 있는 경험과 경력을 제공하기보다 그저 청년들을 더욱 바쁘고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 청년들의 노동문제와 관련해 활동하는 그룹으로는 2010년 경부터 활동을 넓혀온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과 청년들의 주요한 노동 형태 중 하나인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알바연대’¹²등이 있다.

또한 청년 활동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¹³와 같은 중간적 지원 단체가 최근 설립되었는데 청년문제와 관련하여 그나마 포괄적인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수혜자 선정을 통한 ‘개별지원’의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지원을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조건들은 복잡하며, 활동가 인건비 등의 지원보다는 프로젝트 운영에 드는 제한된 항목에만 지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2.2.2. 집 없는 청년들

한국 또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주거와 관련해 청년들의 어려움이 두드러진다. 한국에서 집은 단지 의, 식, 주 중 한 요소가 아니라 근로소득보다 높은 시세 차익을 안겨주고 미래의 자녀에게 증여도 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다. 수차례 반복된 건설 위주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과 이를 기대한 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폭발적으로 팽창해왔고, 부동산 시장의 흥망성쇠는 한국 경제의 흥망성쇠와 역사를 함께 해왔다. 수도권 서울의 경우 평균 집값은 약 4억 5천 3백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거의 두 배에 가깝다. 빈곤층이 이만큼의 돈을 마련하는 데에는 약 36년이 걸리며, 서울에 사는 청년이 자력으로 집을 구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에는 전체 청년(20-34세)의 약 20%인 천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약 절반만이 서울 출신이고 나머지 절반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것이다. 그들 중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경우는 5.6%에 불과하고, 약 60%는 월세를 내며 생활하고 있다. 이

¹¹ 출처 : BIYN 2012 대선정책제안. <https://sites.google.com/site/basicincomey/archive/policy/2012policy>

¹²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처우개선 활동을 벌이고, 최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www.alba.or.kr/

¹³ 서울시와 연세대학교가 협력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http://youthhub.kr>

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시장의 규모는 약 45%인데, 이 중 공공임대시장은 전체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약 5%만을 차지하고 나머지 40%는 민간임대시장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청년들은 민간임대시장에 의존하고 있지만 여기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¹⁴

먼저 고비용의 문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의 경우에도 보증금¹⁵ 천 만원에 월세 40~50만원이 평균이다. 서울 시내에 집이 아닌 ‘방’ 하나를 얻는다 하더라도 목돈이 없으면 어려운 것이다. 그나마 적은 보증금으로 얻을 수 있는 집은 옥탑이나 (반)지하의 형태이고, 그마저도 어려운 청년들은 고시원을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형태들이다. 고시원은 대표적인 열악한 주거환경 중 하나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원래는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거와 학습공간이 합쳐진 간이주거 공간이었으나 보증금 같은 목돈이 필요없고 월세와 광열비만 내면 원하는 기간동안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빈곤층이나 청년층의 주요한 주거형태 중 하나가 되었다.¹⁶ 고시원은 보통 3평(9.9m²)의 좁은 공간이고, 부엌과 화장실, 샤워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법정 최저주거기준¹⁷에 미달한다. 201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년 중 약 11.8%, 서울에 사는 청년의 22.8%가 국가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14m²)에 미달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가나 번화가를 중심으로 원룸 형태의 ‘고시텔’, ‘리빙텔’ 등의 이름을 달고 고급화된 고시원들이 등장하면서 고시원의 가격도 상승하는 추세이다. 고시원 평당(3.3m²) 평균 월세는 15만 2500원으로 이는 2014년 최저 임금인 5210원을 기준으로 약 29시간을 일해야 마련할 수 있는 값이다. 저렴했던 고시원도 점차 주거빈곤계층에게는 부담이 되고, 그들은 더 싸고 열악한 고시원이나 ‘잠만 자는 방’¹⁸ 등으로 밀려나게 된다.

그렇다면 주거 빈곤층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나 대책은 마련되어 있을까. 서울의 경우 2000년대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구 중 24.4%를 차지하는데, 특히 여성은 2, 30대, 남성은 30대 미혼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했다.¹⁹ 그러나 1인 청년가구의 증가에도 한국의 주거 보조 제도는 기존의 가족 중심 지원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보면 철거민이나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신혼 부부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식의 가족 형태를 우선시 하고 있고, 가족의 수나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가점된다. 서울 소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10% 아래를 밑돌다 보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제도도 시행되고 있는데, 대학생 임대주택의 경우 가격은 저렴하지만 공급량이 매우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 사업

¹⁴ 김서연, <청년층 주거문제의 현황과 과제>, 『도시와 빈곤』 제102호, 2013.

¹⁵ 계약 이행을 위해 세입자가 담보로 맡기는 금액. 한국의 경우 보증금의 액수가 크고, 월세와 금액이 반비례한다.

¹⁶ 정민우, <자기만의 방: 고시원으로 보는 청년 세대와 주거의 사회학>, 이매진, 2011.

¹⁷ 최저주거기준은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주거면적 14제곱미터, 전용 부엌 및 화장실, 법정기준에 적합한 환경요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1-490호<최저주거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59613#AJAX>.

¹⁸ 말 그대로 ‘잠만 자는 방’으로, 대부분 쪽방의 형태이고 고시원보다 저렴하지만 최저주거기준에는 현저하게 미달한다.

¹⁹ 1인 가구, 서울특별시 서울통계, http://115.84.165.91/jsp/WWS00/outer_Seoul.jsp?stc_cd=112,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참고.

이 주택을 가진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게는 주요 소득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학가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지역주민이나 원룸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 감소를 이유로 대학의 기숙사 건설을 적극 반대하고 나서는 웃지 못할 갈등 상황도 종종 벌어진다. 그 외에도 전세²⁰ 대출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주택 소유자가 많아 세입자가 기존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생,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계속 발표해왔으나, 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변 거주인들의 반대로 끊임없이 진통을 겪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청년이 국가의 보조를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배경에서 여러가지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청년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은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을 창립해 출자금으로 주택을 짓거나 비영리 공공주택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 외에도 은퇴자 중심으로 꾸려진 불광동의 ‘하우징콕’이나 1인 가구 중심의 성산동 ‘함께주택’ 같은 협동조합형 공유주택 운동이 이제 막 시작되는 추세이고, 몇 해 전부터 서울시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서울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에도 협동조합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규모의 측면에서 보자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대다수의 청년층이 저질/고비용의 주거를 벗어날 길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2.2.3. 빚을 갚는 청년들

낮은 시급과 불안정한 노동조건 사이에서 부모의 증여 없이 자본을 마련할 길이 없는 청년들에게 남는 선택지는 대출이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채는 대학 등록금 대출이다. 학벌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심할 뿐더러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및 근속 연수 차이 또한 큰 한국에서 대학 진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이런 이유로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률이 70%에 달하는 한편 등록금이 굉장히 높기에 등록금을 대출받는 비율 또한 높다.²¹ 장학금 수혜나 취업에 직결되는 학점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가족 부양 등을 이유로 생활비 대출을 받는 대학생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에게는 생활 전반이 부채로 연결되는 셈이다. 청년금융협동조합인 ‘토닥토닥협동조합’이 낸 <청년부채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설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최초 대출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응답했다.²² 정부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학자금 대출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2012년에만 72만 7천명이 2조 3,265억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등록금 대출 잔액 규모는 2012년 11조 3천억으로 2005년에 비해 23배 증가했고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의 수 역시 2005년 18만명에서 2012년 181만명으로 10배가 늘었다.²³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 성적 관리가 어려워져 장학금 수혜 조건을 맞출 수

²⁰ 부동산 소유주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맡기고 집이나 방을 빌려 쓰다가, 계약이 끝난 후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 부동산 가격과 금리가 동시에 올랐던 한국 경제 호황기에 특화되어 아직까지 유지되는 제도이다.

²¹ 전국 4년제 대학교의 2014년 평균 등록금은 666만7천원이다.

²² 토닥토닥협동조합, <청년부채실태조사 보고서>, 2014

²³ 학자금 대출 현황, 교육과학기술부(한국장학재단), 2013,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53

없는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일반학자금의 경우 학기당 1백만원,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기당 150만원의 생활비 대출을 해주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이처럼 생활비와 학자금을 충당해 학업을 마치지만, 구직난과 고용 불안으로 인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5.21%로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약 6.4배 높았고, 대부업체 연체율도 15.9%에 달했다. 2013년 상반기에만 2,000명 이상의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소송, 가압류, 강제 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받았는데, 이는 지난 해의 수치를 이미 넘어선 것이었다.²⁴ 2006년 670명에 불과했던 학자금 대출 관련 신용 유의자는 2012년 말 4만 419명에 달했는데, 신용유의자로 등록될 경우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취업에 제한을 받을수도 있기에, 대출 연체는 청년들에게 또 다른 낙인이 되기 쉽다.²⁵ 고용률이 장기간 낮은 수치를 유지하면서 학자금 외에 생활비, 주거비 등을 대출받는 청년도 많아졌고 이미 신용을 차단당한 연체 경험자들의 34.1%가 생활비를, 7.4%가 주거비를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 경력이 거의 없어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이 불가능해, 제 2 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도 많았는데 부채 금액이 적더라도 높은 금리 때문에 상환 불가능의 위험이 높다. 또한 저급처럼 고용이 불안정하고 최저임금이 낮은 상황에선 일을 해도 부채를 상환하기가 어렵다. 과거 연체자 경험자나 현재 연체 중인 청년들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아,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너무 적어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상습적인 연체로 이어짐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부채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신용유의자 등록을 유예시켜주거나,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부채 문제 전반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또한 기존의 워크아웃 프로그램들은 최장 10년동안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채무 노예’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고, 장기간 빚을 갚는 경험은 청년들로 하여금 비판적으로 미래 설계를 하게하고, 노동 의욕도 떨어뜨린다. 청년의 부채 문제가 높은 대학 진학률, 고비용의 등록금, 높은 생활비와 낮은 임금, 고용 불안정 등 여러 요소의 연쇄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고용을 늘리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효성은 떨어진다. 또한 정치권 안팎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이 언급되어 왔지만, 현 서울시장의 공약이행으로 등록금이 인하된 서울시립대를 제외하고 이 역시 선거철 대학생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으로만 전락했다.

2.2.4. 유령 혹은 좀비가 된 청년들

²⁴ 국회 유기홍 의원실 자료

http://www.kihong.or.kr/lawmakers/lawmakers2.asp?bbs_code=2&mode=view&bbs_idx=26125&page=1&search_type=0&search_word=%uC5F0%uCCB4&bbs_class=

²⁵ 조영우, <미국경제에 부담 커진 학자금 대출, 한국도 대비 필요하다>, LG경제연구원, 2014.
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eco/LGBI1303-02_20140527131447.pdf

이상에서 보았듯, 한국 청년들이 감내하는 열악한 주거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은 ‘풍족한 오늘’도 ‘더 나은 내일’도 약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껏해야 여전히 열악한 공간에서 지내며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하루하루를 — 그나마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 제공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런 현실을 바꾸려는 청년층의 정치적 행동이 두드러지지 않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우선, 다시 한 번 경제적 문제를 들 수 있다. 한국처럼 낮은 임금 때문에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한 국가에서 정치적 활동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연금 생활’이 사실상 부재하는 것 역시 한 몫 한다. 노동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노인층의 생계를 보장할 국민 연금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재정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사회보장제도는 생계를 꾸릴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때문에 은퇴를 하고도 일을 하는 노인이 많은데,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연소득은 평균 849만원에 그쳤다.²⁶ 나아가 ‘부양 의무제’는 노동 능력을 가진 구성원이 있는 가족에 대한 급여 제공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청년층 당사자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 뿐 아니라, 청년층에게 부모 세대 부양 부담을 떠안긴다. 한때는 가족이 공적 영역 대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으나 ‘내려가는 사회’에서는 그것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 한편으로 가족으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어 불안정한 삶에 내몰리는 이가 있고, 반대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불안정한 삶에 내몰리는 이들이 있게 되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이나 부모 부양이라는 문제를 피하고 전통적 생애 주기의 과업들을 수행해 나가는 경우에도 화려한 결혼식 문화,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는 웨딩 푸어, 하우스 푸어, 에듀 푸어 등으로 불리는 채무자의 삶으로 이어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문화적 문제를 들 수 있다. 분단 국가로서 독재 정권 하의 산업화를 경험한 한국에는 권위주의 문화와 함께 반공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다. 보수적인 정치 문화 속에서 정부나 기업-고용주에 대한 비판은 내용에 상관 없이 그 자체로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노동법 관련 교육이나 인권 교육 등을 제공받지 못한 한편 언론이나 기성세대로부터 진보적인 시민사회 운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을 주입 받으며 성장한 한국의 청년 세대 역시 보수적인 정치관을 답습하고 있다.

문화적인 수준을 넘어 한국의 법과 제도 역시 정치 행위를 제약하고 있는데, 189개 ILO 협약 중 단 28개만을 비준한 한국의 노동법은 파업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활동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보장한다. 대기업 삼성은 공공연하게 ‘무노조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체의 경우에도 파업에 참여한 이들은 표적 해고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법적 보복 조치를 받기 십상이다. 파업 등으로 해고 당하고 때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가 재취업하기 어려움은 물론이다. 정치적 층위에서는 국가보안법²⁷이 정부 비판 자체를 차단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 까지도 트위터에서의 농담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일반시민이 기소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 한국에서 노동하는 동물이기를 멈추고 정치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곧 ‘정치범’이 되는 것

²⁶ 노인의 일반특성별 연간총수입, 통계청, 2011,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1_2011N028&vw_cd=&list_id=&scrl=&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

²⁷ 국가 내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사실상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인권을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2년에만 국가보안법 검거건수는 75건에 달한다.

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청소년의 참정권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서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으며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다. 최근에는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도 정치에 참여하며 학습할 수 없고 자신과 직접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 발언할 수도 없다. 그렇게 청년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정치를 낫설어하는 태도는 정치에 대한 막연한 혐오 또는 냉소와 함께 깊은 무력감으로 연결된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삶에 어떠한 주체성도 행사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된 청년들이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자살률이 높다. 2011년 기준 20대 사망자는 총 3,476명인데 이 중 자살자 수는 1,64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7%에 달한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비율도 높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로 10대는 학교 성적이나 진학 문제를 꼽았고, 2,30대는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²⁸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경우 약 25%가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지표들은 현재 한국의 청년들에게는 말 그대로 죽어 유령이 되거나 살아남아 야근하는 준비가 되는 두 가지 선택지만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2.3 기본소득이 가져올 변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청년들에게 매일 조건 없는 현금 소득이 주어진다면 삶에 어떤 변화들이 가능할까?

우선 노동 영역과 관련해 살펴보면, 추가소득인 기본소득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여도 기존의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일자리 나누기가 수월해진다. 또한 늘어나는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볼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가 적었던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내가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게 하는데, 이는 노동시간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개인의 교섭력(bargaining power)을 높여준다. 고민해 볼 여지도 없이 고용자의 요구에 따라 일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선택을 해왔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되돌려준다.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만 했어”라는 변명을 내놓는 대신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스스로 사고하기 시작할 것이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가치를 갖는 노동을 할 수 있고, 여유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기획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전에 비해 해고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고 늘어난 교섭력을 바탕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²⁸ 자살충동에 관한 통계, 통계청.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12HE130R&vw_cd=&list_id=&scrl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

높고, 사고 능력을 퇴화시키는 노동은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당한 추가 노동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는 임금노동중심 사회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먹고 자고 숨 쉬는 데에 드는 기본적인 생존의 비용을 사회가 책임짐으로써 하고 싶은 일과 해야하는 일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은 현재의 시장경제 안에서 화폐로 환산되기 어려웠던 내용의 ‘일’ 또는 ‘활동’을 그 자체로 존중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화폐 환산 여부를 결정하는 시장 또는 국가의 관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일을 고민할 수 있게 된다. 청년들은 돈에 쫓겨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대신 삶에 좀 더 의미있는 선택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고, 가치있다고 여기지만 소득이 적어 일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다. 노동 종류로 인한 계급화(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낮은 계급)가 그 사람의 계급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고, 개인이 그 자신으로서 존중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을 통해 국민총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몸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차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기본소득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역시 보장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선택’에 대한 존중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와 노동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불안에 떨지 않을 권리를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이다. 결혼, 육아 등의 생애 과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경제적 안정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추구하는 것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다.

공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용이 줄어든다. 한국 청년들의 평균 생활비는 약 96만원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43.5만원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⁹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주거비로 지출되던 비용으로 문화, 사회 생활을 즐기거나 저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인가구의 전세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청년들은 더싼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는데, 부가적인 소득이 생긴다면 가격으로 인한 잦은 이사가 줄어들고, 선택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더 많은 취업기회를 따라 대도시로 이주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귀촌이나 귀농을 선택하고 싶다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의 주거비와 생활비 규모가 도시에 비해 적고, 대기 오염이나 소음이 덜하는 등 보다 쾌적한 주변환경 덕에 건강관리 비용도 줄어든다. 어쩔 수 없이 머무르는 게 아닌, 살고 싶은 곳에 적극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거주자의 자유가 실현되어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부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소득이 생긴다면 부채를 만들 가능성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피치 못하게 대출을 받더라도 정기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한 확실한 상환 계획을 세우고, 연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공동체 경제나 빈민들의 삶의 방식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은 관계 안에서 현금이 관여하지 않는 삶을 해결해 왔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기본적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부조금 외에

²⁹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청년주거실태조사 보고서>, 2013.

도 누군가와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드는 커피값, 밥 값, 맥주 한 잔 값이 없어 거짓말로 약속을 취소하고 집안에 고립되는 순간이 빈번하다. 시간을 들여 노동력과 같은 형태로 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 역시도 실행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기본소득은 이 같은 관계를 회복할 수단, 즉 누군가와 함께 보낼 시간과 나눌 음식 따위가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최근 한국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화두로, 특히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하에 새로운 시장의 실험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 중심에는 ‘마을 만들기’와 같은 소규모 지역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사업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기술했듯 이러한 새로운 공간들에 참여할 여유가 현저히 부족한 것이 청년들의 현실이다. 이때 기본소득이 여유를 제공하며 커뮤니티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처분에 대한 자유를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를 수 있는 적절한 동기와 기회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히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정치적) 권리들을 박탈 당한 청소년들을 사회가 ‘개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나의 몸, 나의 시간 어느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무력감을 넘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 자원은 모두에게 사회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인간으로서의 권리, 개인으로서의 자립에 대한 감각을 키워줄 것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이 청년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거나 청년 문제들을 일순간에 해결한다거나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얼마간이라도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수단이 조건 없이 주어짐으로써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청년기의 특성상 ‘출발의 실패’는 이 시기 뿐 아니라 이후 생애과정에 장기적인 ‘상처’효과(Scar effect)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³⁰

또한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매개로 개인의 욕망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는 과정에서 이전엔 없었던 ‘말하기의 공간’이 생겨날 것을 기대한다. 그 공간에서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기본소득을 요구하고, 기본소득 도입 이후의 삶을 상상한다면 기본소득은 개인의 삶과 사회 공론장을 연결하는 강력한 정치적 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달 간 한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재난과 사고를 경험하는 동안 청년들 사이에서 사회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막연한 믿음은 급속히 무너져 내렸다. 이미 몇 년 전 가까운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경제발전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보다 이윤이 앞서는 상황을 용인해온 결과였다. 이제는 더 물러설 것 없이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죽는다”는 위기감을 바탕으로 문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과는 다른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발명하고 경험할 시간을 제공해 줄 기본소득의 도입이 절실하다.

3. 나가며

³⁰ 김수정, 김영,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빈곤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제20집 제1호

이제 한국의 청년들에게 ‘행복하냐’고 묻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하여 잔인한 질문이 되었다. 그저 ‘안녕하냐’³¹는 물음마저도 각자가 인정하고 싶지 않던 통각을 건드린다.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는 삶이라는 당연한 바람도 위태로운 생활 너머의 과분한 꿈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한국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에 비해 자원을 갖고 움직임 권력을 가진 이들이 내놓는 대책의 내용은 안일하다. 우리는 기본소득이 현상황의 부족한 지점들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아직 대부분의 한국 청년들은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지만, 기본소득은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 그리고 사회 운동의 실패를 보고 자라 정치적 냉소를 갖게 된 지금의 한국 청년들에게 다시금 정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최근 들어 청년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은 생겼으나, 이는 여전히 선별적이고 수혜적인 지원 프레임에 갇혀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를 말하는 젊은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렵고 의욕적으로 출범했던 청년단체들도 사회적, 경제적 자원 부족으로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청년담론은 끝났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온다. 그러나 청년담론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청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청년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를 이야기하는 운동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한국은 아시아 식민국가 중 드물게 급속한 산업화를 통한 압축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으며 긴 군부독재를 지나 민주화까지 성취한 국가지만, 그 과정에서 다층적인 문제들이 집약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다. 그럼에도 표면적인 발전의 모습 때문에 그간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성장 모델로 여겨져 왔으나, 개개인의 생존마저 사회로부터 보장 받을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청년들의 삶은 지속될 수 없으며, 언젠가는 미래세대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 한국에서 기본소득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면 아시아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도입을 촉구하며, 에리히 프롬의 말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Without such changes, no plan for the future will succeed, because there will be no future.”

“이와 같은 변화가 없다면, 미래를 위한 어떤 계획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미래란 없을 것이므로.”

³¹ 2013년 겨울 ‘안녕들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한 대학교에 붙은 대자보를 시작으로, 이에 화답하며 ‘안녕하지 못합니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들이 연쇄적으로 온/오프라인 게시판을 뒤덮었다.

4. 참고문헌

단행본

- 브루스 액커만 외, «분배의 재구성», 나눔의 집, 2010
- 정민우, «자기만의 방: 고시원으로 보는 청년 세대와 주거의 사회학», 이매진, 2011.

논문

- 김서연, <청년층 주거문제의 현황과 과제>, 「도시와 빈곤」 제102호, 2013
- 김수정, 김영,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빈곤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제20집 제1호.

웹사이트

- 통계청, <http://kosis.kr/>
 - 시도비정규직 근로자규모, 2014
 - 저임금 근로자 비율, 2014
 - 산재보험 가입실태, 2013
 - 산업재해현황, 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2014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2013
 - 노인의 일반특성별 연간총수입, 2011
 - 자살충동에 대한 충동 및 이유(13세 이상 인구), 2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서울특별시 서울통계, http://115.84.165.91/jsp/WWS00/outer_Seoul.jsp?stc_cd=112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장학재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53
- 국회 유기홍 의원실 <http://www.kihong.or.kr>

- 인터넷 취업포털 잡링크 www.joblink.co.kr

- 서울 청년 인포그래픽스

http://www.youthhub.kr/uploads/attachment/file/5354c9c2cf97721f7c00067a/%EC%84%9C%EC%9A%B8%EC%B2%AD%EB%85%84_%EC%9D%B8%ED%8F%AC%EA%B7%B8%EB%9E%98%ED%94%BD_%EC%B5%9C%EC%A2%85%EA%B2%B0%EA%B3%BC%EB%AC%BC.pdf

기타

- BIYN <2012 대선정책제안>

<https://sites.google.com/site/basicincomey/archive/policy/2012policy>

- 조영무, <미국경제에 부담 커진 학자금 대출, 한국도 대비 필요하다>, LG경제연구원, 2014.

-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청년주거실태조사 보고서>, 2013.

- 토닥토닥협동조합, <청년부채실태조사 보고서>, 2014

- 박병률, ‘저소득층은 돈 없고 고소득층은 시간없어.. 문화 오락비 줄였다’, 경향비즈니스라이프, 2014.6.6

- 서상철, ‘한국 직장인이 야근을 하는 진짜 이유는?’, 프레시안 신문 2011.6.7